

한국의 사회적 배제 성격에 대한 연구

- 유럽연합 회원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문진영

(서강대학교)

[요약]

본 연구는 한국과 유럽 국가의 사회적 배제 지표를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사회적 배제 현상이 유럽 국가의 그것과 비교하여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목적을 가지고 작성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2장에서는 유럽에서 사회적 배제의 개념이 어떠한 정치적 맥락에서 발원하고 발전해왔는지를 살펴보고, 사회적 배제에 대한 개념규정을 시도한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에스핑 안데르센(G. Esping-Andersen, 1990, 1999)의 복지레짐론과 실버(M. Silver, 1994)의 사회적 배제 파라다임을 비교하여 논의함으로써, 사회적 배제 현상에 대해서 복지레짐론이 어떠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한다. 본 연구의 본문에 해당되는 제4장은 2000년도부터 2007년까지 한국과 유럽 6개국(보수주의: 독일과 프랑스, 자유주의: 영국과 아일랜드, 시민주의: 스웨덴과 핀란드)의 사회적 배제 지표를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통해서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한국의 사회적 배제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정책적 함의를 구하고자 한다.

주제어: 사회적 배제, 주성분분석, 복지레짐, 사회적 배제 파라다임

1. 서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인류역사의 발전은 빈곤과의 투쟁으로 점철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가난은 인류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자, 또 한편으로는 지금의 문명사회를 건설하게 된 자극제가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이성(理性)을 가진 인간이 이룩한 최고의 국가형태인 복지국가체제에서 '빈곤의 예방 및 박멸'을 가장 핵심적인 정책목표로 선언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전

(奎) 국민에게 국가가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함으로써 누구라도 인격적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가진 복지국가가 등장한 지 60년이 지났다. 하지만 60년이 지난 현재 복지국가의 모국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에서도 빈곤의 문제는 해결되기 커녕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실은 소득이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기존 복지국가의 방식이 빈곤문제 해결에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즉 복지국가의 건설 당시에는 국민최저선(national minimum)이라는 잣대를 일률적으로 설정하고, 한 개인(가구)의 소득이 이에 미달할 경우 국가의 예산으로 채워주면 빈곤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가졌으며, 특히 전후 복지국가의 총 설 계자라고 할 수 있는 베버리지(W. Beveridge)는 국가(사회)보험제도가 발전하면서 국민(공공)부조제도는 소멸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후의 제도 발전은 이들 초기 복지국가를 건설한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 단순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복지국가체제하에서 소득이전 프로그램으로 기본 생계를 유지시킨다 하더라도, 그 개인이나 가구가 빈곤에 빠지게 된 원인이 제거되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국가의 의존(welfare dependency)에 빠지게 되어 빈곤의 문제가 만성화·세습화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문진영, 2004: 254-255).

따라서 '물질적 결핍(빈곤)'이나 '일할 기회의 박탈(실업)'과 같은 20세기의 문제의식을 가지고서는 후기 산업사회사회의 사회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 아니라, 문제의 핵심을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사회문제를 일차원적이고 정태적인 상태에서 파악하는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개념이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등장한 개념이 바로 사회적 배제이다. 따라서 사회적 배제라는 개념에는 태생적으로 다차원적이고 역동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는데, 사회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서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후기 산업사회의 기본적인 특성과 잘 부합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연합 회원국에서는 이미 빈곤이라는 개념보다는 사회적 배제라는 개념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유럽연합(EU) 등 국제기구에서도 사회적 배제를 공식적인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유럽보다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 이상 늦게 사회적 배제라는 개념이 도입되었고, 최근에 들어서야 비로소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에서 사회적 배제라는 개념이 학문적으로 조명을 받기 시작한 시기는 IMF 경제위기와 맞물린다. 1997년 말부터 경제위기가 본격화되자 한국 정부는 급기야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었고, IMF를 포함한 국제금융은 한국경제에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엄격한 구조조정을 요구하게 되었다. 즉 이들은 소위 구조조정 차관의 조건(SAL: Structural Adjustment Loan Conditionality)으로 한국의 금융시장의 개방과 더불어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요구하였다. 당시 경제위기 극복을 최우선적 과제로 설정한 신생 국민의 정부는 이러한 국제자본의 신자유주의적 요구를 거의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다.

그 결과 한국 경제는 실업률이 급등하고 빈곤자의 수가 늘어나서, 생계형 범죄가 창궐하고 가족이 해체되며 노숙자가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등 당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미증유의 사회적 위기가 전면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위기는 경제위기가 극복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구조적으로 내재화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빈곤'이나 '실업'과 같은 경직된 개념으로는 당시 한국사회의 문제를 총괄적으로 파악하기 힘든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물질적 결핍이나 근로기회의 박탈을 넘어서서 후기 산업사회의 사회문제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필요하였는데,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개념으로 사회적 배제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던 것이다.

2) 한국의 사회적 배제 연구

사회복지학계에서 가장 먼저 사회적 배제라는 개념을 제시한 선구적 연구는 박능후(1999)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는 이 연구에서 사회적 배제에 대한 대책으로서 근로연계복지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였는데, 사회적 배제에 대한 개념적 논의보다는 주로 정책대안 제시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후의 연구에서는 주로 유럽에서 고안되고 발전된 사회적 배제의 개념적 논의가 주를 이루었는데, 특히 심창학(2001)은 프랑스에서 사회적 배제가 어떠한 담론적 함의를 가지고 발전하였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병현·최선미(2001)의 연구는 사회적 배제에 대한 개념적 논의와 함께 한국의 빈곤정책에 대한 함의를 구하였다.

이후 사회적 배제에 대한 연구는 영역별로 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여성의 사회적 불리에 초점을 맞춘 연구(김영란, 2002; 송다영, 2003; 배미애, 2007; 정미숙, 2008; 박영미, 2008)와 장애인에 대한 연구(이익섭·최정아·이동영, 2007; 박형진, 2008), 그리고 근로빈곤층에 대한 연구(신명호, 2004; 윤성호, 2005, 2008; 한상진, 2005; 남춘호·이성호·이상록, 2006; 한상진·김용식, 2007)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전통적인 사회복지 대상자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비정규직(장지연, 양수경, 2007)과 외국인 근로자(이태정, 2005; 김순양·이지영·남경선, 2008), 북한이탈주민(류지웅, 2006; 윤인진·이진복, 2006), 소아암 환자(최권호, 2008), 그리고 교통약자(노시학, 2007)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지리학적 관점에서 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문제 등 공간적 개념으로서 사회적 배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등장하였는데, 서수정·김주진·정경일(2004), 남원석·전홍규(2004), 홍인옥(2005), 하성규·서종녀(2006), 이원호(2006)가 대표적이다.

한편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배제된 집단에 대한 규범주의적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사회적 배제에 대한 측정지표화를 위한 작업도 진행되었는데, 강신옥 외(2005), 김안나(2007a, 2007b), 김태수(2009)가 대표적이다. 특히 김교성·노혜진(2008)은 퍼지 집합이론을 이용하여 사회적 배제를 측정하여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배제가 발원한 유럽에서는 개념적 논의나 특정 집단에 대한 배제현상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지만, 기본적으로 국제비교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회적 배제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는 매우 드문 편인데, 문진영(2004)은 사회적 배제와 복지레짐론을 결합하여 스웨덴(사회민주주의), 프랑스(보수주의), 영국(자유주의)의 사회적 배제현상을 비교 분석하여 복지레짐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이후의 연구(문진영, 2008)에서는 동유럽 이행기 국가와 서유럽 국가의 사회적 배제현상을 비교하는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자본주의로 이행된 동유럽 국가의 경우 사회주의의 유산이 남아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과 유럽 국가들의 사회적 배제 지표를 비교분석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사회적 배제의 개념이 지극히 유럽적인 접근법이라면 사회경제적 조건과 정치체제 그리고 문화적인 정체성이 상이한 한국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인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물론 김안나(2007a)는 유럽연합의 사회적 배제 개념이 한국적 상황에 적용이 가능한지를 논의하고 있으며, 김태수(2009)는 외래인의 경우를 들어서 한국적 적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연구는 실제 유럽의 사회적 배제 현상과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국제비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에서 개발된 사회적 배제 지표가 한국에 적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한국의 사회적 배제 지표의 성격은 유럽과 비교하여 어떠한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3) 연구의 목적

지금까지 한국에서 이루어진 사회적 배제에 대한 연구는 유럽에서 개발된 사회적 배제라는 개념이 한국적 현실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암묵적인 전제(前提)하에서 한국의 사회적 배제 현상만을 가지고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과 유럽 국가의 사회적 배제 지표를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사회적 배제 현상이 유럽 국가의 그것과 비교하여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목적을 가지고 작성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2장에서는 유럽에서 사회적 배제의 개념이 어떠한 정치적 맥락에서 발원하고 발전해왔는지를 살펴보고, 사회적 배제에 대한 개념규정을 시도한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에스핑 안데르센(G. Esping-Andersen, 1990, 1999)의 복지레짐론과 실버(M. Silver, 1994)의 사회적 배제 패러다임을 비교하여 논의함으로써, 사회적 배제 현상에 대해서 복지레짐론이 어떠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한다. 본 연구의 본문에 해당되는 제4장은 2000년도부터 2007년까지 한국과 유럽 6개국(보수주의: 독일과 프랑스, 자유주의: 영국과 아일랜드, 시민주의: 스웨덴과 핀란드)의 사회적 배제 지표를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통해서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한국의 사회적 배제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정책적 함의를 구하고자 한다.

2. 사회적 배제의 개념

1) 사회적 배제 개념의 등장배경

사회적 배제를 처음 학문적으로 연구한 학자는 막스 베버(Max Weber)라고 할 수 있는데, 그는 사회적 배제를 사회적 폐쇄(social closure)의 한 형태로 파악하여, 한 집단이 자신의 우월한 지위와 특

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다른 집단을 희생시키려는 시도로 이해하였다(Burchardt, Le Grand, Piachaud, 이하 BLP, 2002: 1-2; 문진영, 2004: 257). 즉 사회적 폐쇄란 기득권 집단이 잠재적 경쟁자 집단을 열등하거나 자격이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일종의 지배와 복종의 과정으로,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뚜렷한 차이 예를 들자면, 인종이나 언어, 출신 집안, 종교, 학벌 등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잠재적 경쟁자를 외부화하는 과정을 말한다(Murphy, 1988: 8).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폐쇄를 통한 (사회적) 차별’은 피지배계급에 대한 통치수단으로 혹은 주변집단 대한 핍박의 형태로 반복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일상적인 행위로, 우리가 현재 논의하고 있는 사회적 배제와는 차원을 달리한다. 사회적 배제가 배버의 사회적 폐쇄 혹은 사회적 차별과 구분되는 사회과학적 언어로 재탄생한 계기는 공화주의적 전통이 강한 프랑스에서 마련되었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당시 프랑스의 경제기획성의 책임자였던 피에르 마세(Pierre Massé)에 의해서 처음으로 사회적 배제가 공식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하였는데, 그는 국가의 관리체계에서 이탈되어 있는 집단 특히 사회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행정용어로 사용하였다. 이후에 1974년 당시 프랑스 정부의 사회부 장관이었던 르노와르(René Lenoir)가 『배제된 사람, 프랑스인 열사람 중의 하나』(*Les Exclus, Un Français sur dix*, 1974)라는 저서를 출판하였는데, 그는 이 책에서 사회적 배제를 둘러싼 중심 문제는 기존의 경제적 의미에서의 빈곤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부적응(social misfit)의 문제라고 지적하였다(심창학, 2001: 190). 그리고 르노와르는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을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면서도 국가 사회보장 시스템에 포섭되지 못한 “장애인, 자살시도자, 거동불편 노인, 학대받는 아동, 약물남용자, 비행자, 주변적이고 반사회적(asocial) 인사” 등 다양한 사회 부적응자로 규정하였다(Silver, 1995: 63). 이렇듯 르노와르가 사회적 배제의 핵심에 사회적 부적응이 있다고 정리한 이후에, 유럽에서는 “빈곤을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현상”에 대한 학문적 연구뿐만 아니라 정책적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적 배제’라는 단어의 저작권(authorship)은 르노와르가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가 미친 영향은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Sen, 2000: 1; 문진영, 2004: 257에서 재인용).

이러한 사회적 배제의 개념은 유럽연합에서 정책적 차임(policy initiatives)으로 공식화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연구되고 현실세계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유럽연합에서 사회적 배제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빈곤’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졌던 영국 보수당 정부의 정치적 전략이 있었다(Atkinson, 1997: 9). 당시 유럽공동체 집행위원장 자크 들로르(Jacques Delors)를 중심으로 한 연방주의자(federalist)들은 유럽공동체의 사회적 공간(*espace social*)의 창출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당시 영국의 보수당 정부는 회원국의 주권을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맹렬하게 반대하였다.¹⁾ 이러한 당시 유럽공동체 집행위원회와의 갈등의 연장선에서, 영국 정부는 개념적으로 명확하면

1) 이러한 이유로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특정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회정책 조항은 영국을 제외한 당시 11개 회원국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타협이 이루어지게 된다. 원래 사회정책 의정서(Protocol of Social Policy)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한 장(chapter)으로 구상하였으나 영국의 반대로 별도의 부속문건으로 타협이 되었고, 이 의정서에 의하여 영국은 나머지 11개국만이 사회정책을 합의할 수 있다고 양해하는 내용의 사회정책 합의서(Agreement of Social Policy)를 채택하기에 이른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문진영(2009)을 참조하시오.

서도 유럽연합의 차원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빈곤'이라는 용어 대신에 개념적으로 모호하고 포괄범위가 넓은 '사회적 배제'라는 개념을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유럽공동체 집행위원회는 영국의 의사를 반영하여 사회적 배제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Munck, 2005: 21-22).

이렇듯 유럽연합에서 사회적 배제라는 용어가 공식화되는 배경에는 사회적 유럽(social Europe)을 강조하는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의 주권침해에 극도로 예민하였던 영국 보수당 정부 사이의 힘겨루기가 있었지만, 일단 유럽연합의 차원에서 공식화되자 전(全) 세계로 빠르게 전파되었다. 특히 제3차 빈곤 퇴치 5개년계획(the third wave of five-year anti-poverty programme)이 시작된 1990년 이후부터 사회적 배제라는 용어는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2) 사회적 배제의 개념규정

사회적 배제는 명쾌하게 정의내리기가 어려운 모호한 개념이다. 사회적 배제라는 현상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다차원적이고 역동적인 성격 때문에 사회적 배제를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합의된 개념을 도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그 이유는 첫째, 사회적 배제를 발생시키는 원인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배제 현상이 서로 맞물려 있는 상태에서 즉 원인과 결과가 상호작용을 해가며 배제의 악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적 배제는 특정한 인구나 집단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적 상징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사회의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집단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주변부 집단을 총칭하는 하나의 상징 개념인데, 실상 각각의 주변부 집단은 서로 상이하고 이질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셋째, 사회적 배제는 다양한 층위에서 서로 중첩적으로 일어난다. 즉 자신(자발적 배제), 개인, 가족, 지역사회, 국가, 그리고 세계 등 다양한 층위에서 서로 중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완결적인 개념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적 배제를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거의 유일한 합의점은 바로 사회적 배제를 단일한 기준에 입각하여 개념규정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Weinberg and Ruano-Borbala, 1993, translation by Silver, 1995: 59).

하지만 사회적 배제가 개념적으로 모호하다고 해서, 사회적 유용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후기 산업사회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s)이 전면적이고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사실을 고려할 때, 기존의 빈곤보다는 사회적 배제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사회적 함의가 클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빈곤과 박탈을 더욱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배제는 빈곤이라는 개념과 고용상태와 사회적 통합을 연결시킬 수 있으며, 둘째, 빈곤의 경제적인 차원과 정치·사회적 차원을 연결시킬 수 있으며, 셋째, 사회적 박탈이 일어나고 사회적 포섭이 행해지는 사회적 과정과 제도적 구조(institutional structures)의 역할을 분석할 수 있으며, 넷째, 빈곤퇴치 전략, 사회적 결속과 사회정의를 구상하고 실천하는데 있어서 세계화의 함의를 구할 수 있으며, 다섯째, 공민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와 시장 접근성의 관계를 탐구할 수 있게 한다(Gopinath, 1995: v-vi).

이러한 사회적 유용성과 장점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배제라는 개념을 가지고 현실세계에서 구체적

인 정책을 구상하고 입안하고 실행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수반된다. 빈곤의 예를 들자면, 절대적 개념을 사용하건 혹은 상대적 개념을 사용하건 특정한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하에 속하는 개인은 사회정책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정책목표 인구(target population)가 비교적 뚜렷이 드러나는 반면에, 사회적 배제라는 개념은 '사회적 위험의 총체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정책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오히려 이러한 사회적 배제가 가지고 있는 개념상의 모호성에 따른 정책대상의 불분명성 때문에 정책결정자들에게는 인기가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Matsaganis and Tsakoglou, 2001). 위에서 살펴본 유럽연합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정책결정자들은 결핍이나 박탈보다는 개념적으로 명확하지 않고 광범위하며, 특히 특정 집단을 지목하기 어려운 사회적 배제라는 개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정책실천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배제에 대한 개념규정은 미룰 수 없는 선결과제이다. 왜냐하면 사회적 배제가 보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개념이라면, 그래서 정책대상 인구를 규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정책적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기 산업사회에서 한 개인에게 부과되는 사회적 위험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배제에 대한 개념규정이 선결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배제를 구성하는 구성요소로서 다차원성(multi-dimensional), 상대성(relativity), 기관(agency), 그리고 역동성(dynamics)을 지적하고 있다(Room, 1995; Silver, 1995; Walker, 1995; Barry 1998; BLP, 1999, 2002; Atkinson and Hills, 1999; Vleminckx and Berghman, 2001; Whelan, Layte, Maitre and Nolan, 2002; Richardson and Le Grand, 2002; 문진영, 2004). 사회적 배제라는 개념이 물질적 결핍(예를 들면 빈곤)이나 기회의 박탈(예를 들면 실업)과 같은 단선적이고 정태적인 개념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 배제는 한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해 다차원적인 불리함이 부과되는 동태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베르그만(J. Berghman, 1995)은 다음의 표로 설명하고 있다.

〈표 1〉 사회적 배제의 구조

	정태적 결과 (Static outcome)	동태적 과정 (Dynamic process)
소득(Income)	빈곤(Poverty)	궁핍화(Impoverishment)
다차원적 (Multidimensional)	박탈(Deprivation)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자료: Berghman(1995), Table 2.1.

사회적 배제의 네 가지 구성요소를 설명하자면, 첫째, 사회적 배제는 단순히 개인이나 가구의 '가처분 소득의 결여' 혹은 '실업 상태'를 의미하지는 않고, 이를 포함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다차원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차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박탈과 비교하여, 사회적 배제는 한 사회의 주류 질서 혹은 도덕적 토대로부터 점차 유리되는 일련의 동태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Castles, 1990; Room, 1995: 6에서 재인용).

둘째, 사회적 배제는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사회관계(social relations) 속에서 발생하고 재생산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절대적인 개념을 사용할 수 없고(Richardson and Le Grand, 2002: 498), 특정한 상황맥락에서 발생하는 상대성을 가지고 있다. 즉 어떤 사람이 사회적으로 배제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개인적이고 고립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행위가 영향을 미쳐서 사회적 배제가 구체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이다. 즉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사회적 배제가 발생하는 것이다(문진영, 2004: 259).

셋째, 사회적 배제를 사회의 주류적 질서나 도덕적 토대로부터 유리되는 행위라고 정의한다면, 이 과정에는 반드시 이러한 행위를 기획하고 실행하며 재생산하는 주체(agent)가 존재한다. 따라서 사회적 배제는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곧 사회적 배제를 창출하는 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배제 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문진영, 2004: 259).

넷째, 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역동성(dynamic)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사회적으로 배제되었다는 것은 단지 그가 현재 실업상태이거나 혹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현재의 실업상태나 빈곤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빈곤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개인이나 가구는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점차 잃어가고, 그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와 단절됨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결속감을 상실하고, 따라서 이들로부터 정치적인 지지를 받기 힘들어진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빈곤의 경험은 사회적 배제로 이행하게 된다(Walker, 1995: 103). 따라서 사회적 배제의 구성요소를 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기존의 정책들이 불평등한 자원배분에 초점을 두어 소득재분배 정책에 집중한 것에 반해, 기회에 대한 균등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인적 자원의 개발과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등 예방적 차원이 정책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김안나 외, 2008: 50).

이러한 네 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사회적 배제의 개념은 “사회구성원이 사회에 통합적으로 기능하는 사회, 경제, 정치 그리고 문화 시스템으로부터, 전면적으로나 혹은 부분적으로 고립되는(shut out) 역동적인 과정”(EC Commission, 2003)으로서, “한 개인이 지리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한 사회에서 시민으로서(상대성) 누려야 할 경제적, 문화적, 정서적인 활동(다차원성)에 지속적(역동성)으로 참여하지 못한다면, 그는 그 사회(기관)로부터 배제되었다(문진영, 2004: 261)”고 할 수 있다.

3. 복지레짐론과 사회적 배제 패러다임

사회정책학에서 현대판 고전(modern classic)으로 자리 잡은 에스핑 안데르센의 복지레짐론(1990, 1999)은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와 ‘계층화(stratification)’라는 두 가지 잣대를 가지고 복지국가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탈상품화란 노동자가 시장의 상품화(commodification)로부터 자유로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에스핑 안데르센은 이 지표를 개발하고 점수화하는 실증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²⁾ 또한 계층화 분석은 복지국가의 여러 기관과 제도(arrangements)가 그 사회의 계급적 위치(신분이나 지위 포함)를 지속(자유주의 국가), 또는 강화(보수주의 국가)시키는지 아니면

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셋째, 보수주의 레짐에 속하는 공화주의적 전통이 매우 강한 프랑스는 교육영역을 제외한 모든 지표에서 유럽평균에 근사(近似)한 짝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결국 프랑스의 사회적 배제의 수준이 바로 현재 유럽 사회적 배제의 수준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4. 한국 사회적 배제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실증적 연구

1) 자료

사회적 배제를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1980년대 말까지는 주로 사회적 배제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면, 1990년대를 넘어서면서 사회적 배제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와 같은 실증적인 분석으로 이행하고 있다(문진영, 2004: 264). 이러한 발전에 결정적인 계기는 2000년 리스본 유럽 정상회의(The Lisbon European Summit)였다. 이 회의의 의결에 따라서,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각 회원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회적 배제 지표를 개발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2001년 2월 유럽 사회적 보호위원회(Social Protection Committee)의 주관 하에 사회적 지표 개발을 위한 전문가 집단(technical group)이 구성되어 지표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그 결과 각 회원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빈곤 및 사회적 배제의 지표(common indicators of social exclusion and poverty) 18개를 구성하게 되었다(문진영, 2004: 267-268 참조). 이러한 유럽연합의 사회적 배제 지표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① 빈곤율, ② 소득배율, ③ 실업률, ④ 저학력자 비율, ⑤ 영아사망률 등 5가지 지표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각각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⁵⁾

첫째, 사회적 배제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기초적이며 중심적인 영역은 물론 소득수준인데, 여기에서는 중위소득의 60%수준인 빈곤율과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5분위 소득배율을 살펴보았다. 둘째, 실업률 지표는 단순히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소외를 넘어서서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고립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사회적 배제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선정하였다. 셋째, 교육영역에 해당하는 저학력자 비율은 25세-64세 인구 중에서 중등교육수준 혹은 그 이하의 교육수준에 있는 사람들의 비율을 말한다. 넷째, 영아사망률 지표는 1차 보건의료 수준과 임산부의 영양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보건지표이기 때문에(Stewart, 2002: 30-31), 사회적 배제 지표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5개의

5) 유럽연합의 사회적 지표는 1차적 지표(primary indicators)와 2차적 지표(secondary indicators)로 나뉘는데, 1차적 지표(10개)로는 '빈곤율', '소득분포', '빈곤지속성', '상대적 빈곤 격차', 'NUTS 2수준의 고용률', '장기실직', '무직 가구원 수', '조기 교육기회 상실', '평균 기대수명', '소득수준별 자각 건강상태'가 있으며, 2차적 지표(8개)로는 '빈곤산포', '특정시점 빈곤율의 변화', '소득이전(移轉) 이전(以前)의 빈곤율', '지속 빈곤율', '지니계수', '장기실직자 비율', '극장기(極長期) 실직가구 비율', '저학력자 비율' 등 모두 18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18개의 지표는 크게 '빈곤', '소득분포', '실업', '교육', '건강'의 5가지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5가지 영역에서 대표적인 지표 하나씩을 선택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지표를 통해서 유럽의 주요국과 한국의 사회적 배제 수준을 비교한 결과는 아래의 <표 3>과 같다.

<표 3> 유럽연합 회원국과 한국의 사회적 배제지표 비교(2000-2007)

단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빈곤율(*)	프랑스	16	13	12	12	13	13	13	13
	독일	10	11	n/a	n/a	n/a	12	13	15
	스웨덴	n/a	9	11	n/a	11	9	12	11
	핀란드	11	11	11	11	11	12	13	13
	영국	19	18	18	18	n/a	19	19	19
	아일랜드	20	21	n/a	20	21	20	18	18
	한국	n/a	n/a	n/a	21.6	22.1	22.6	22.6	22.3
소득배율*	프랑스	4.2	3.9	3.9	3.8	4.2	4.0	4.0	3.8
	독일	3.5	3.6	n/a	n/a	n/a	3.8	4.1	5
	스웨덴	n/a	3.4	3.3	n/a	3.3	3.3	3.5	3.4
	핀란드	3.3	3.7	3.7	3.6	3.5	3.6	3.6	3.7
	영국	5.2	5.4	5.5	5.3	n/a	5.8	5.4	5.5
	아일랜드	4.7	4.5	n/a	5.0	5.0	5.0	4.9	4.8
	한국	n/a	n/a	n/a	6.13	6.17	6.18	6.16	6.11
실업률(**)	프랑스	9.0	8.3	8.6	9.0	9.2	9.3	9.2	8.3
	독일	7.5	7.6	8.4	9.3	9.8	10.6	9.8	8.4
	스웨덴	5.6	4.9	4.9	5.6	6.3	7.3	7.0	6.2
	핀란드	9.6	9.1	9.1	9.1	8.9	8.3	7.7	6.9
	영국	5.4	5.0	5.1	5.0	4.7	4.8	5.4	5.3
	아일랜드	4.3	4.0	4.5	4.7	4.5	4.4	4.5	4.6
	한국	4.4	4.0	3.3	3.6	3.7	3.7	3.5	3.2
저학력자 비율(***)	프랑스	37	36	35	35	34	33	33	31
	독일	18	17	17	17	16	17	17	16
	스웨덴	22	19	18	18	17	16	16	15
	핀란드	27	26	25	24	22	21	20	19
	영국	37	37	36	35	34	33	32	32
	아일랜드	54	45	40	38	37	35	34	32
	한국	32	30	29	27	26	24	23	22
영아사망률(‰)****	프랑스	4.5	4.6	4.2	4.2	4.0	3.8	3.8	n/a
	독일	4.4	4.3	4.2	4.2	4.1	3.9	3.8	n/a
	스웨덴	3.4	3.7	3.3	3.1	3.1	2.4	2.8	2.5
	핀란드	3.8	3.2	3.0	3.1	3.3	3.0	2.8	n/a
	영국	5.6	5.5	5.2	5.2	5.1	5.1	5.0	4.8
	아일랜드	6.2	5.7	5.0	5.3	4.6	4.0	3.7	3.1
	한국	n/a	n/a	5.3	n/a	n/a	4.7	4.1	n/a

자료:

*빈곤율(below 60% of national median disposable income)과 소득배율(Income quintile share ratio): 유럽회원국의 자료는 Eurostat: <http://epp.eurostat.ec.europa.eu>; 한국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년 빈곤통계연보.

**실업률(Standardised unemployment rates): OECD, Employment Outlook 2009, Statistical Annex.

***저학력자비율(25-64세 인구중 중등교육이하 이수자의 비율):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9.

****영아사망률(infant mortality): OECD Health Data 2009.

위의 <표 3>은 2000년도부터 2007년까지 한국과 유럽 6개국(보수주의: 독일과 프랑스, 자유주의: 영국과 아일랜드, 시민주의: 스웨덴과 핀란드)의 사회적 배제 지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시계열 자료를 사용한 이유는 특정한 연도의 자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스냅사진(snap shot)’의 한계를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즉 특정한 연도를 사용할 경우, 사회경제적 조건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일부 국가의 지표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계열 자료가 선호된다. 하지만 시계열 자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위의 표와 같이 결측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보정할 수 있는 단순하면서도 편리한 방법은 아래의 <표 4>와 같이 평균값을 구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표 4> 사회적 배제 지표의 평균(2000-2007)

국가	단위: % ₁₀₀				
	빈곤율	소득배율	실업률	저학력자비율	영아사망률
프랑스	13.125	3.975	8.863	34.250	4.157
독일	12.200	4.000	8.925	16.875	4.129
스웨덴	10.500	3.367	5.975	17.625	3.038
핀란드	11.625	3.588	8.588	23.000	3.171
영국	18.571	5.443	5.088	34.500	5.188
아일랜드	19.714	4.843	4.438	39.375	4.700
한국	22.240	6.150	3.675	26.625	4.700

2) 분석방법: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사회적 배제 지표는 모두 5개이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측정값이 5개씩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형태의 다차원 다변량 데이터는 총체적으로 해석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서 어느 나라의 사회적 배제 정도를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통해서 파악하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빈곤율과 소득불평등 정도가 매우 높지만 실업률은 매우 낮은 나라의 경우에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빈곤율과 소득배율은 매우 높지만, 다른 나머지 세계의 지표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크게 높지 않거나 오히려 더 낮은 현상을 보인다. 이럴 경우에 한국은 다른 유럽에 비하여 사회적 배제 정도가 더 낮다고 해석하는 것이 정확한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차원을 축소해서 자료를 해석하는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주성분분석은 변수벡터를 적절히 선형변환시켜 정보를 가능한 한 많이 보존하는(최소의 정보손실) 소수의 몇 개의 새로운 인공변수를 창조함으로써, 원래의 p 차원의 변이를 m 차원으로 축소하여($p > m$), 전체 체계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사용되는 기법으로(김기영·전명식, 1989: 5), 이를 통해서 우리는 주어진 자료의 군집성(cluster)과 이상점(outlier)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위의 5개 차원의 사회적 배제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2개의 사회적 배제 주성분(principal component)으로 축소하여(2개의 인공변수), 각국의 사회적 배

제의 성격을 해석하고자 한다. 즉 해석하기도 어렵고 그림으로 현시화(顯示化)하는 것도 불가능한 5차원의 데이터를 2차원 데이터로 차원축소하여 좌표에서의 위치를 구하고 이에 대해서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3) 데이터 분석

위에서 언급한 5개의 사회적 배제 지표의 2000년에서 2007년까지의 평균치를 가지고 주성분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은데, 제1주성분의 설명력이 76.1%이고, 제2주성분까지의 누적설명력이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2차원으로 축소해도 데이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고유값과 고유벡터(2000년-200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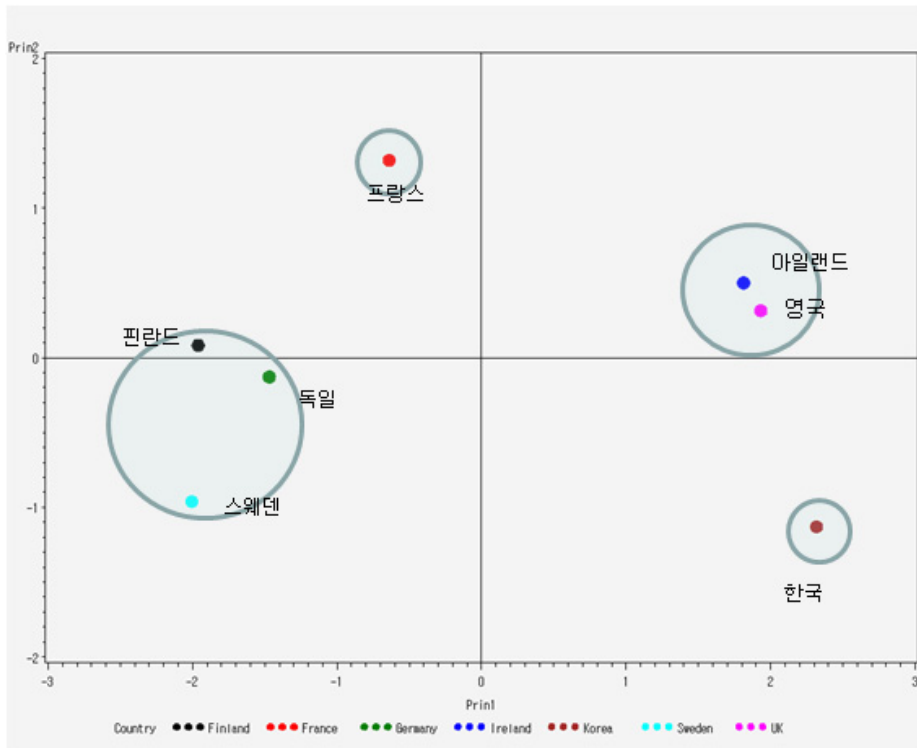
주성분	Eigenvalue	Proposition	Cumulative	Eigenvectors	
1	3.80518	0.761	0.7610	빈곤율	0.50223
				소득배율	0.48468
				실업률	-0.41170
				저학력자비율	0.36216
				영아사망률	0.46061
2	0.71883	0.1438	0.9048	빈곤율	-0.13870
				소득배율	-0.22810
				실업률	0.53668
				저학력자비율	0.74916
				영아사망률	0.28194
3	0.37838	0.0757	0.9805		
4	0.08339	0.0167	0.9972		
5	0.01422	0.0028	1		

위의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주성분 1의 데이터 변동 설명력은 76%이고, 이 좌표축[(+0.50×빈곤율)+(0.48×소득배율)-(0.41×실업률)+(0.36×저학력자비율)+(0.46×영아사망률)]이 각 국가의 사회적 배제의 성격을 가장 뚜렷하게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주성분 1로는 설명되지 않은 나머지 24% 중에서 주성분 2가 14%를 설명하고 있고, 이 주성분 2의 좌표축도 마찬가지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성분분석을 하면, 주성분 좌표축체계를 기초로 각 국가의 좌표점을 구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경우, 원래 데이터 좌표는 [22.24(주성분 1), 6.15(주성분 2)]이지만 직교회전된 새로운 좌표축인 주성분좌표축을 기초로 한국의 좌표를 표시하면 [2.3198(주성분 1), -1.12950(주성분 2)]이 된다. 즉 전체 데이터 변동의 90%정도를 설명하는 2차원의 좌표점을 구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를 표와 산점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6〉 각 국의 주성분 1과 주성분 2의 좌표점

	프랑스	독일	스웨덴	핀란드	영국	아일랜드	한국
주성분 1	-0.6385	-1.4676	-2.0034	-1.9594	1.9394	1.8151	2.3198
주성분 2	1.3201	-0.1282	-0.9604	0.0839	0.3139	0.5002	-1.1295



〈그림 1〉 사회적 배제의 2차원 산점도

4)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

주성분분석의 결과로 도출된 좌표축의 해석에서 중요한 것은 산출된 주성분 내 계수들의 크기와 부호이다. 주성분 1의 경우, 숫자의 크기는 모두 0.3이 넘기 때문에 어느 지표도 무시하지 못하고, 실업률을 제외한 모든 지표에서 양의 값을 갖는다. 즉 이 주성분 1 좌표축은 다소 거칠게 표현하자면, [(빈곤율+소득배율+저학력자비율+영아사망률) - (실업률)]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의 〈표 4〉의 원 자료를 보면, 대체적으로 빈곤율이 높으면 (소득배율, 저학력자비율, 영아사망률)이 높고, 빈곤율이 낮으면 (소득배율, 저학력자비율, 영아사망률)도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실업률은

정반대로 나타난다. 즉 빈곤율이 낮으면 실업률이 높고 빈곤율이 높으면 실업률이 낮는데, 특히 한국과 스웨덴이 대척점에 서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한국은 스웨덴보다(빈곤율, 소득배율, 저학력자비율, 영아사망률)이 모두 높지만 실업률은 더 낮기 때문에 주성분1 좌표축에서 한국과 스웨덴이 정반대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영국과 아일랜드는 거의 모든 지표에서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좌표점이 근접해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주성분 2(설명력 14%)의 좌표는 부호로 보면 [(실업률, 저학력자비율, 영아사망률)-(빈곤율, 소득배율)]이지만, 적재 절대값 0.3이하인 지표를 무시한다면, 주성분2 좌표축은 [저학력자비율, 실업률]로 설명된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는 이 두 지표의 값이 아주 큰 반면에 한국과 스웨덴은 상당히 작고, 다른 나라들은 중간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배제1(주성분 1 좌표축)과 사회배제2(주성분 2 좌표축)를 이용한 산점도(그림 1)를 보면, 국가 간 어느 정도의 군집성을 확인할 수 있다. 자유주의 복지레짐에 속하는 영국과 아일랜드는 사회적 배제에서도 유사한 성격을 보이고 있으며, 시민주의 복지레짐에 속하는 핀란드와 스웨덴은 사회적 배제지표에서도 근접한 좌표를 갖는다. 다만 보수주의 복지레짐으로 분류되는 독일은 프랑스보다 시민주의 복지레짐 국가와 근접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독일은 “한 사회에서 생산된 복지가 국가, 시장 그리고 가구에게 할당(공급)되는 양식”(Esping-Andersen, 1999: 73)인 복지레짐은 보수주의에 속하지만, 복지의 결과(welfare outcomes)에 해당하는 사회적 배제 지표는 시민주의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의 사회적 배제 지표의 경우는 어떠한 군(群)에도 속하지 않지만, 자유주의 복지레짐과 근접한 성격을 보인다. 즉 빈곤율과 소득배율은 높지만, 다시 말해서 가난한 사람이 많은 불평등한 사회이지만, 실업률은 낮은 자유주의 복지레짐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전형적인 자유주의 국가인 영국과 아일랜드보다도 [빈곤율+소득배율 vs 실업률]의 대비가 더 크고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로 한국은 실업자에 대한 사회보호의 수준이 워낙 미약해서 실업자들이 사회보장제도에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하향적 재취업을 하거나 혹은 영세적인 자영업에 창업하는 경향을 보인다.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늘어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한 근로빈곤(working poor)층의 확대가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둘째, 한국은 노동시장에서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다가 구직을 포기한 실망실업자의 규모가 워낙 커서, 빈곤율은 높은 반면에 실업률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낮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5. 결론: 사회적 배제의 한국적 적용을 위한 논의

위의 제3장에서 살펴 본 실버(Silver, 1994)의 사회적 배제 패러다임의 핵심적인 주장은, 한 사회에서 사회적 배제 현상을 이해하고 다루는 양식(사회적 배제 패러다임)은 그 사회구성에 각인되어 있는 이념적 지향에 따라서 분화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사회적 배제 패러다임이 지극히 유럽적인 틀로서, 공화주의(연대 패러다임), 자유주의(분화 패러다임) 그리고 사회주의(독점 패러다임) 모두 유럽적 토양에서 싹트고 발전한 이념이라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이 이념들은 시민혁명을 계

기로 점화된 (유럽식) 근대화 프로젝트의 중추(中樞)로서, 시민적 합리주의라는 큰 틀 위에서 한 사회를 어떻게 근대화시킬 것인가를 밝히는 지도원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유럽에 비해서 근대화 프로젝트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배제 현상은 유럽의 그것과 비교하여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 요구된다.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우선 한국의 사회적 배제와 유럽의 사회적 배제를 비교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한국의 사회적 배제 현상을 유럽 각국의 사회적 배제와 같이 분석할 경우, 어떠한 군집(cluster)에 속하는지 혹은 이상점(outlier)에 위치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주성분분석을 사용하여 2000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과 유럽 6개국(독일,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스웨덴, 핀란드) 등 7개국의 사회적 배제 지표를 총체적으로 파악하여 한국의 사회적 배제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사회적 배제의 성격은 전형적인 자유주의 국가와 비슷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다시 말해서, 한국은 빈곤률과 소득배율은 높지만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자유주의 국가와 가깝지만, 전형적인 자유주의 국가인 영국과 아일랜드보다도 [빈곤률+소득배율 vs 실업률]의 대비가 더 크고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국 사회에서 모든 사회적 배제의 원인이 되고 있는 소득관련 사회적 배제 지표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불평등 지표는 모든 사회적 배제의 원인으로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세우고 실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윌킨슨과 피켓(R. Wilkinson and K. Pickett, 2009)은 그들의 저서 *The Spirit Level: Why more equal societies almost always do better*에서 한 사회의 소득불평등이 그 사회의 전반적인 사회문제를 결정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즉 소득불평등 지표(5분위 소득배율)가 높은 사회일수록 보건·사회문제 지표⁶⁾가 심각한 반면에 1인당 국민소득과 보건·사회문제 지표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Wilkinson and Pickett, 2009: 21).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소득불평등과 빈곤과 같은 소득관련 배제 지표가 다른 사회적 배제 현상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소득불평등의 정도가 일정 수준의 임계점을 넘으면, 자유주의의 전형인 미국과 영국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각종의 사회문제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소득관련 사회적 배제, 특히 소득불평등이 다른 사회적 배제를 생성하고 재생산하는 구조의 핵심인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낮은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제도를 정비하는 국가행동 계획(National Action Plan)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6) 여기에서 보건사회문제 지표는 사회의 신뢰도, 정신건강, 기대수명과 영아사망률, 비만, 아동교육성취도, 십대 임신, 살인, 수감률, 사회이동성으로 이루어졌다(Wilkinson and Pickett, 2009: 19).

참고문헌

- 강신옥 외. 2005. 『사회적 배제의 지표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기영·전명식. 1989. 『SAS 주성분 분석』. 자유아카데미.
- 김순양·이지영·남경선. 2008. “숙련 외국인노동자의 사회적 배제와 정책적 대응”. 『아태연구』 15(2): 1-30.
- 김안나. 2007a. “유럽연합EU 사회적 배제 개념의 한국적 적용가능성 연구”. 『유럽연구』 25(1): 351-379.
- 김안나. 2007b. “한국의 사회적 배제 실태에 관한 실증적 연구”. 『사회이론』 32: 227-256.
- 김안나 외. 2008.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배제계층 지원방안 연구 : 사회적 배제의 역동성 및 다차원성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영란. 2002. “성인통적 관점에서 본 사회권의 재정립에 관한 연구”. 『경제와 사회』 9(2): 187-208.
- 김태수. 2008. “한국사회에 대한 사회적 배제 가설의 적용가능성 검토: 외래인을 중심으로”. 『2008년도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87-108.
- 김태수. 2009. “한국에서의 사회적 배제 지표의 개발 시론: 외래인을 중심으로”. 『2009년도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11-137.
- 남원석·전홍규. 2004. “사회적 배제와 주거문제”. 『상황과 복지』 19: 85-129.
- 남춘호·이성호·이상록. 2006. “노동 빈곤층의 사회적 배제와 빈곤화 유형 분석: 전주시 사례에 대한 생애사 분석을 중심으로”. 『산업노동연구』 12(1): 259-306.
- 노시학. 2007. “교통이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영향”. 『지리학연구』 41(4): 457-467.
- 노혜진·김교성. 2008.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가구주의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관한 중단연구”. 『사회보장연구』 24(4): 167-196.
- 류지웅. 2006.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배제” 연구 : 소수자의 관점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미간행).
- 문진영. 2004. “사회적 배제의 국가간 비교연구: 프랑스, 영국, 스웨덴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6(3): 253-277.
- 문진영. 2005. “빈곤레짐에 관한 비교 연구: 유럽연합 회원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7(1): 245-269.
- 문진영. 2008. “동유럽CEE 국가의 사회적 배제 현상과 복지체제에 관한 연구”. 『유럽연구』 26(1): 47-77.
- 문진영. 2009. 『유럽연합의 사회정책에 관한 연구』. 집문당.
- 문진영 외. 2008. 『사회권 지표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
- 박능후. 1999. “사회적 배제 극복을 위한 근로연계복지정책의 효과성”. 『1999년도 한국사회보장학회 추계 학술발표회 자료집』. 5-28.
- 박병현·최선미. 2001. “사회적 배제와 하층계급의 개념 고찰과 이들 개념들의 한국빈곤정책에의 함의”. 『한국사회복지학』 45: 185-219.
- 박영미. 2008. “복지국가에서의 빈곤의 여성화와 사회적 배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8(4): 11-41.
- 박형진. 2008.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극복을 위한 자립생활 지원방안”. 『사회연구』 9(1): 69-94.
- 배미애. 2007. “여성의 사회적 배제와 지역 차에 관한 연구”. 『여성학논집』 24(1): 151-191.

- 배순석. 2006. 『도시 주거공간의 사회통합 실현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서수정·김주진·정경일. 2004. “국민임대주택과 주거복지: 임대주택단지의 사회통합적 계획을 위한 사회적 배제 실태 조사연구”. 『공간과 사회』 22: 24-57.
- 송다영. 2003. “사회적 배제 집단으로서의 저소득 모자가족과 통합적 복지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 사회복지학』 54: 295-319.
- 신명호 외. 2004.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본 빈곤층 실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심창학. 2001. “사회적 배제 개념의 의미와 정책적 함의 : 비교관점에서의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44: 178-208.
- 이원호. 2006. ‘사회적 배제의 측정과 빈곤현상의 공간적 패턴: 서울시의 사례연구’. 『지리학연구』 40(3): 367-379.
- 이익섭·최정아·이동영. 2007. ‘장애인 자립생활모델에 대한 탐색적 고찰 : 사회적 배제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14: 49-81.
- 이태정. 2005.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사회적 배제 연구 - ‘국경 없는 마을’ 사례”. 『사회연구』 6(2): 139-178.
- 장지연·양수경. 2007. “사회적 배제 시각으로 본 비정규 고용”. 『노동정책연구』 7(1): 1-22.
- 정미숙. 2008. “성별화된 빈곤과 사회적 배제: 저소득 여성가구주의 빈곤대응 방식을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25(2): 3-44.
- 최권호. 2008. “소아암 생존자의 사회적 배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하성규·서중녀. 2006.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14(3): 159-181.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2008년 빈곤통계연보』.
- 한상진·김용식. 2007. “사회적 배제 과정과 자활의 측면들”. 『노동정책연구』 7(1): 139-171.
- 한상진. 2006. 『울산지역 빈곤층의 사회적 배제와 자활 : 사회전기적 접근』. 울산대학교 출판부.
- 홍인욱. 2005. “영구임대주택 주민들의 사회적 배제 해결 및 사회통합 방안”. 『도시와 빈곤』 76: 32-60.
- Atkinson, T. 1998. ‘Social Exclusion, Poverty and Unemployment’, in *Exclusion, Employment and Opportunity*, edited by A. Atkinson and J. Hills. CASE Paper.
- Barry, B. 1998. *Social Exclusion and the Distribution of Income*. CASE paper no. 12. London: Centre for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 Berghman, J. 1995. “Social Exclusion in Europe : Policy Context and Analytical Framework.” pp. 10-28. in *Beyond the Threshold : the Measurement and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edited by G. Room. Bristol: Policy Press.
- Burchardt, T., J. Le Grand and D. Piachaud. 2002. “Introduction” pp. 1-12. in *Understanding Social Exclusion*. edited by J. Hills, J. Le Grand and D. Piachau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astles, R. 1990. *Extreme Cases of Marginalisation: from Vulnerability to Deaffiliation*. Paper presented to a conference “Poverty, Marginalisation and Social Exclusion in the Europe of the 1990s.” organised under the auspices of the European Commission, Alghero, Sardinia.
- EC Commission. 2003. *Joint Report on Social Inclusion*. SEC20031425. Brussel.
- Esping-Andersen, Gøsta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Cambridge: Polity.
- Esping-Andersen, Gøsta 1996. After the Golden Age? Welfare State Dilemmas in a Global Economy,

- in *Welfare State in Transition: National Adaptation in Global Economies*, edited by Gøsta Esping-Andersen. London: Sage.
- Esping-Andersen, Gøsta 1997. "Hybrid or Unique: The Japanese Welfare State Between Europe and America."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73: 179-189.
- Esping-Andersen, Gøsta 1999.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Eurostat, <http://epp.eurostat.ec.europa.eu> 검색일 2009년 10월 1일.
- Gopinath, P. 1995. 'Preface' to *Social Exclusion: Rhetoric, Reality, Responses*, edited by G. Rodgers, C. Gore and J. Figueiredo. Geneva: ILO.
- Kuhn, T. 1970.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2nd ed. Enlarged.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 Lenoir, René. 1974. *Les Exclus: Un Français sur Dix*. Paris: Editions du Seuil.
- Matsaganis, M. and Tsakoglou, P. 2001. "Social Exclusion and Social Policy in Greece." pp. 188-203. in *Social Exclusion and European Policy*, edited by D. Mayers, J. Berghman and R. Salais. Cheltenham: Edward Elgar.
- Muffels, R. and D. Fouarge 2002. "Do European Welfare Regimes Matter in Explaining Social Exclusion?" pp. 202-232. in *Social Exclusion in European Welfare States*, edited by R. Muffels, P. Tsakoglou, and D. Mayes. Cheltenham: Edward Elgar.
- Munck, R. 2005. *Globalisation and Social Exclusion*. Bloomfield, CT: Kumarian.
- Murphy, R. 1988. *Social Closure*. Oxford: Clarendon Press.
- OECD. *Employment Outlook 2009*. Statistical Annex. Paris: OECD.
-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9*. Paris: OECD.
- OECD. *Health Data 2009*. Paris: OECD.
- Richardson, L. and J. Le Grand. 2002. "Outsider and Insider Expertise: The Response of Residents of Deprived Neighbourhoods to an Academic Definition of Social Exclusion." *Social Policy and Administration* 36(5): 496-515.
- Room, G. 1995.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the New European Agenda for Policy and Research." pp. 10-28. in *Beyond the Threshold: the Measurement and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edited by G. Room. Bristol: Policy Press.
- Silver, H. 1994. "Social Exclusion and Social Solidarity: Three Paradigms."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33(5-6): 531-578.
- Silver, H. 1995. "Reconceptualizing Social Disadvantage: Three Paradigms of Social Exclusion." in *Social Exclusion: Rhetoric, Reality, Responses*. edited by G. Rodgers, C. Gore and J. Figueiredo. Geneva: ILO.
- Stewart, K. 2002. *Measuring Well-Being and Exclusion in Europe's Regions*. CASEpaper 53. Centre for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 Vlemingckx, K., and J. Berghman. 2001. "Social Exclusion and the Welfare State: an Overview of Conceptual Issues and Implications." pp. 27-46. in *Social Exclusion and European Policy*, edited by D. Mayes, J. Berghman, and R. Salais. Cheltenham: Edward Elgar.
- Walker, R. 1995. "The dynamics of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pp. 102-128. in *Beyond the*

Threshold : the Measurement and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edited by G. Room ed., Bristol: Policy Press.

Weinberg, A., Ruano-Borbalan, J. 1993. "Comprendre l'exclusion." *Sciences Humaines* 28: 12-15.

Whelan, C., R. Layte, B. Maitre and B. Nolan, 2002. "Income and Deprivation Approaches to the Measurement of Poverty in the European Union." pp. 184-201, in *Social Exclusion in European Welfare States*, edited by R. Muffels, P. Tsakoglou and D. Mayes, Cheltenham: Edward Elgar.

Wilkinson, R. and K. Pickett 2009. *The Spirit Level: Why more equal societies almost always do better*. London: Allen Lane.

A Cross-national Study of Social Exclusion - with Special References to Korea and European Countries -

Moon, Jin-Young
(Sogang University)

This paper purports to compare th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of social exclusions in Korea with those in the European countries, notably Germany, France, Sweden, Finland, Ireland and U.K. For this purpose, chapter two examines political and social origins of social exclusion as an alternative concept to poverty or unemployment. Chapter three discusses social exclusion paradigms of Silver(1994) in reference to welfare regime theories of Esping-Andersen(1990). Subsequently chapter four, using two artificial social exclusion indicators by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defines the basic nature of social exclusion of Korea in comparison with those of the six European countries. Chapter five duly concludes that social exclusions in Korea are very similar to those of liberal countries (Ireland and U.K.) in that income indicators (poverty and inequality) of Korea are much worse, whereas unemployment rate is relatively low.

Key words: Social Exclusion,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Welfare Regime, Social Exclusion Paradigm.

[논문 접수일: 09. 11. 14, 심사일: 09. 11. 30, 게재 확정일: 09. 12. 15]